

아르헨티나 비상사태 선포의 배경과 향후 전망

델라루아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각)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주민들의 약탈, 점거사태가 전반적인 소요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음.

I. 비상사태 선포의 배경

- 금번 사태는 델라루아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위기 과정에서 내연하던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마침내 폭발한 것임.
- 델라루아 정부는 1999년 12월 출범 직후부터 전임 정권의 유산인 재정적자 문제로 경제위기 발발 가능성에 계속 노출되어 왔음. 계속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 억제를 위한 태환정책 고수로 막대한 외부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IMF의 지원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어 왔음.
- IMF가 요구한 자금인출 선행조건의 핵심인 재정적자 축소를 위해 긴축정책을 지속하게 되고 이는 결국 근로자와 연금생활자 등 서민층에게 극도의 고통생활을 요구하게 되었음.
- 그러나 극도의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회생기미를 보이지 않고 2001년 12월 5일에는 IMF마저 추가 지원을 거부하면서, 위기감이 극도에 달하였고 12월 13일 근로자들의 총파업에 이어 약탈과 방화가 계속되다가 정부에 의해 비상사태 선포라는 최악의 상황을 연출하게 된 것임.

II. 향후 전망

- 아르헨티나 정부는 경제난 악화의 책임을 물어 카바요 경제장관에게 부여되어 왔던 특별권한을 박탈하고 야당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국민불만 해소를 위한 뚜렷한 대책의 부재로 위기 상황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
- 아르헨티나의 국가위험도가 최악인 상태에서 향후 동국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IMF지원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공여 형식도 긴급구제금융의 성격을 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IMF 자금 수혜과정에서 그동안 IMF가 요구해온 재정적자 축소외에 태환제 폐지, 달러공용화 실시,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등 제반 경제정책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번 사태로 향후 대선에서 야당인 페론당의 집권이 예상됨.
- 국제적으로는 아르헨티나 사태로 2002년에도 2001년 내내 위축되었던 브라질 등 인근 국가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2001년 초의 터키, 아르헨티나의 금융위기 발생시와 유사하게 국제적 신용경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

문의 : 개도국신용평가실 과장 배상욱 ☎ 3779-6657, subae@koreaexim.go.kr